

다산포럼



강수돌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주 망월동 묘지, 공식적으로는 ‘국립 5·18민주묘지’라 한다. 그러나 내 기억엔 ‘광주민주항쟁열사십터’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추모탑 뒤 제1묘역엔 박기순-윤상원 열사가 ‘함께’ 누워 계신다. 그리고 그 왼편 도로를 건너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제3묘역도 나온다.

1980년 5·17 비상계엄에 항거하던 초창기 열사들의 안식처로 기억한다. 아주 잘 다듬어진 제1묘역에 비해 제3묘역은 좀 더 ‘자연스런’ 분위기다. 5.18 당시 사망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민주, 노동, 통일운동을 하다 산화한 열사들이 함께 안식한다. 모두 이 시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그 기운이 ‘바로 이곳’ 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특히 박기순-윤상원 열사는 영혼결혼식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유명하다. 박기순 열사(1958-1978)는 전남대 국사교육과 3학년이던 1978년 학교에 가지 못

윤상원 열사와 역사의 피뢰침

한 노동자들을 위해 다른 동지들과 함께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 야간학교를 만들었다. 들불야학이었다. 이어 광천공단에 ‘위장 취업’ 노동자가 되었다. 대학생들 포 기하고 낮에는 노동자, 밤에는 야학 강학(교사)을 하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꿨었다. 그런데 그는 그해 겨울, 불의의 사고(연탄가스)로 만 20년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

윤상원 열사(1950-1980)는 1971년에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중간에 군 복무(하사관) 후 1976년 복학한 뒤 1978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서울 주택은행(봉천동 지점)에 취업했으나 6개월 뒤 시작했다. ‘민중의 길’으로 가려는 마음이 컸던 탓이다. 광천동의 한 공장에 ‘위장 취업’했고 1979년부터 박기순이 운영하던 들불야학 강학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연이 두터워졌다.

윤상원은 또 들불야학 인근의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운동도 했다. 10.26 이후엔 본격적 노동운동 조직화에 뛰어들던 중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의해 1980년 5.17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5.18항쟁의 불을 댕겼다. 이어 녹두서점에서 동지들과 화염병을 제작, 보급했다. 투쟁의 홍보를 위해 들불야학 동지들과 함께 ‘투사 회보’도 제작, 배포했다. 항쟁의 치열한 과정 중 (5.25.) 무기반납과 투항을 둘러싼 분열이 가시화하자 열사는 새로운 항쟁지도부인 ‘시민학생투쟁위’를 만들었다. 투항 아닌 투쟁 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해 스스로 ‘대변인’이 되었다. 그렇게 도청 사수 최후 투쟁을 하다 계엄군 총에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윤 열사는 계엄의 번갯불을 먼저 맞고 쓰러짐으로써 공동체와 역사를 구해냈다. 앞장서서 ‘역사의 피뢰침’(하성흡)이 된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설사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비장한 각오였다. 그에게 죽음보다 귀한 것은 양심과 역사였다.

이 마음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썼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 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렇다. 양심과 용기가 사회와 역사를 살린다. 만일 우리가 강자 앞에 굴복한 뒤(“강자 동일시”), 돈이나 권력에 영혼을 판다면 우리 공동체는 윤석열 일당의 12·3 쿠데타 앞에 처참하게 붕괴되었을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고 서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을지 모른다. 또 6.25 같은 전쟁이 터져 ‘김건희 2025 통일대통령 만세!’ 같은 헛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지도 모른다.

망월동을 다시 방문하고 보니, 나는 얼마나 양심과 용기를 지키며 사는지 거듭 자문하게 된다. 민주 영령들이시여,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청춘 특특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보통 취임 100일쯤 기자회견을 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 정부는 ‘주말이 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기자회견도 일찍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점은 주류 언론에 밀려 소외된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하고 질문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가급적 어떤 언론사도 소외되지 않고 많은 기자가 질문할 수 있도록 질의 기회를 대통령이 직접 손을 잡아가며 챙기기도 했다.

호남을 시작으로 시민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 미팅은 대국민 소통방식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인 세상

으로 1~2시간가량 라이브로 진행되었고, 간혹 개인 민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시민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주제와 벗어날 때는 단호하게 끊고, 발언이 길어지면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첫 타운홀 미팅 개최 장소가 광주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만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수도권과는 먼 삶을 살아온 호남 지역 대학생으로서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인구수가 140만명 선을 붕괴하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는 호남의 거점도시이며 5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구 유출 수를 보여준다.

지역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고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안정적인 고향에서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큰맘 먹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이라도 보러 가려면 교통비와 숙박비만 해도 10만원이 넘게 든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다는데 서울에 집이 없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서울로 상경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세와 생활비로만 월급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고향을 벗어나 연고 없는 서울에서 생존하는 것이 지역 청년들의 미션이다. 지역 청년들은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을 수 없다. 서울 한 번 가려면 큰마음을 먹어야 하는 지역 청년들과는 다르게 이미 저만치 앞서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답은 첫 직장을 지역으로 잡으면 절대 서울로 못 올라간다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용이 되었다는 다짐도 그저 낭만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질타받는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이 2025년에도 당연히 여겨진다는 게 우리나라가 여전히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역 청년들의 꿈이 수도권과의 거리만큼 멀어지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역이 금방 발전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다. 그러나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와 그 궤도에 올라탔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5년 중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정부의 행보를 주목하며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만큼 국민의 희망을 향해 점차 나아가길 기대한다.

새 정부의 실용적인 에너지정책

김성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한국은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에너지로 쓰는 탈탄소 정책을 해야 한다”고 취임 초기에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총량을 100이라 하면 90을 재생에너지에, 10을 원전에 투자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구촌은 ‘원전 재평가’ 시대를 맞고 있다.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자력 시대”라며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1985년 원자력금지법을 제정했던 덴마크와 2003년 탈원전을 택했던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등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AI(인공지능)산업이 뜨면서 점점 원자력 발전이나 소형모듈 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하므로 ‘간헐성’ 발전원 대신 전력이 끊길 걱정 없는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적, 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절실한 기회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조수 간만의 차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ESS(에너지 저장체계 Energy Storage System)산업, 수소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와 AI를 연계해 피지컬 AI(휴먼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산업을 광주·전남의 혁신주체 산업으로 필히 육성해야 한다. 물론 ESS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발전원으로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지난해 구글이 미국 네바다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를 가동

한 것은 귀감이 될만하다. 아마존,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조합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부터 ‘배터리 활용의 태양광 발전’이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과 미국 신규 가스화력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배터리도 리튬(Li+) 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화재의 가능성이 낮은 나트륨(Na+) 이온 배터리가 대규모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쓰더라도 AI 서비스가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한도 내에서 AI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한다. 더욱이 매년 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추세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정부의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놓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포석’이란 말도 맞다. 탈원전도, 탈탈 원전도 아닌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다.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을 떨치려면 명확한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유기의 파초선(芭蕉扇)’을 언급하며 “파초로 만든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고 했다.

최근 잘 나가는 K-원전도 한계가 있고 그 부산물의 재처리 문제 등 원전 사고 시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에너지 정책에 적용됐으면 한다. 목표를 위한 속도전보다 현실과 실용주의가 반영된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더 지속가능할 것이다.

社說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특혜는 안돼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모두 학교로 복귀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지 1년 5개월만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환자나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복귀를 선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환자단체들이 그간 발생한 국민 피해에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공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의대협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일 것이다. ‘의대생들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도 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복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데 전제 조건이 집단 유급과 제적 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가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학교에 맡겨두면 눈치만 보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전남대만 하더라도 예과생 89%가 ‘학사경고’ 대상자이고 본과생 51%가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귀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아찔했던 조대병원 수술실 화재 총체적 점검을

어제 조선평의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화재는 10여분 만에 의료진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지만 의료진 35명이 연기를 마셔 일부는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고 환자 등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에 화재가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병원내 화재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소방당국이 추정하는 유력한 화재 원인은 의료용 멀티콘센트다. 수술실 사각기둥에 설치된 멀티콘센트는 24구의 콘센트를 쫓는 용도인데 여름철 과부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실 멀티콘센트는 비단 조선평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에선 흔히 사용하는 만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

요할 것이다. 조선평의원은 이날 화재로 수술실 15개 전체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응급환자 수용도 중단했는데 병원 측은 최소 이틀 간의 안전 점검이 끝나야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고 수술이 장기화되면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에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장기이탈하면서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인데 조선평의원 환자 수술 수요까지 부담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대기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방당국은 철저한 화재 원인 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조선평의원 측은 빠른 사고 수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초유의 수술실 화재가 병원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無等鼓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 아래까지의 지점을 말하는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SLL)은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으로 휴전이 되면서 만들어진 군사적 경계선(線)이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니 마음대로 넘을 수도, 들어설 수도 없는 선이다.

‘취업’ 남방한계선, ‘인재’ (고급인력) 남방한계선은 이같은 개념을 빚낸 것으로, 해당 선을 넘어가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단어다. 수도권에만 500대 기업 본사 77%(385곳)가 있고 우

남방한계선

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여기 사는 취업 준비생들도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무직·연구개발직 남방한계선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판교라인, 기술직 남방한계선은 기흥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흥라인으로도 불리었다. 최근엔 이같은 개념을 확장해 주요 대기업 R&D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모아놓은 ‘고급인력 남방한계선’이라는 지도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라와 있

다. 서울아닌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남방한계선은 수원까지임을 엿볼 수 있는 지도로 인력, 돈, 기업이 쏠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1극(極) 사회를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꺼내면서 남방한계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말수록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지방들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 사실은-”이라고 했다.

젊은 청년이 없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제 때 구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일할 의사 한 명 채용하기 힘든 나라,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가. ‘고급인력’ 남방한계선이 해남 땅끝이 되는 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김지를 사회부장 dok2000@



공순환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강사
전 광주 광산중학교 교장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실력,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에너지 정책도 눈길을 끈다. 4대강 보(洑) 전면 개방, 탈(脫)원전, 탈(脫)탄소 등이다. 탈탄소 현실화는 하반기에 결정되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줄이고 탄소배출권은 유상 할당을 확대할 경우 일어날 일이다.

산업계가 탈탄소 기조 아래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생산량을 줄이면 그 결과로 매출이 줄고 일거가 감소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한국은 5년마다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탄소배출 감축이 목표다. 올 하반기 이 목표를 올려 2035년까지 60%를 감축한다면 탄소 3억300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많은 현상들이 모두 탄소배출이 원인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집 부 220-0649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대 표 FAX 222-4918)		(FAX 222-8005)	
문 화 부 220-0624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예 향 부 220-0692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FAX 222-0195)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디 지 털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